

보도설명자료

('22. 10. 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반도체 지원예산 중 일부사업이 중복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

(10.3일자 TV조선 「반도체 초강대국 만든다더니....곳곳 중복예산, 인프라 지원엔 0원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※ 기획재정부, 과기정통부, 교육부 공동배포

1. 기사내용

- '23년 반도체 산업 예산지원사업 중 『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』은 산업부, 과기부 중복사업으로 사업명칭과 내용이 동일하며, 반도체 아카데미 등 교육센터 구축사업도 부처간 사업 중복임
- 전력, 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 3,884억원이 전액삭감되는 등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첫째 예산부터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편성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① 기재부·산업부·과기부·교육부는 상호협의 등을 통해 반도체 지원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'23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였음
- ② 『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*』은 산업부·과기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, 중복사업이 아님

* (내용) 차세대 반도체 소자, 설계 및 제조공정 장비 분야 기술개발('20~'29년)
(사업비) 10,096억원: 산업부 5,216억원(상용화공정 등), 과기부 4,880억원(신소자·Si반도체 등)

- ③ 『반도체 아카데미 사업』은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교육센터 구축 사업과 달리, 단기 집중 인력양성을 위해 업계 주도로 대기업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실무교육*을 제공하고, 이를 통해 학력·직무·수준별 맞춤형 인력을 양성(5년간 3,600명 이상)하는 사업으로 중복이 아님

* 취업준비생(4개월), 소부장 기업 재직자 OJT(1개월), 재직자 전문교육 등

- ④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은 예타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'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

- 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6% 세액공제를 적용중이고, 내년부터 8%로 인상 예정. 또한 R&D 투자에 대해 최대 40% 세액공제 적용 중임

- 그 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, 국내외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확대 등 다양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 중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최우혁 과장(044-203-4270)/류종민 사무관(4272)
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이성원 과장(044-215-7310)/김정수 사무관(7313)
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정상은 과장(044-203-6835)/구현규 사무관(6838)
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윤두희 과장(044-202-6230)/이하은 사무관(6235)